



사찰화재 예방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도윤수
대한불교조계종
충무원 문화부 연구원

1. 사찰화재의 의미와 현황

이 땅에 불교가 들어 온지 1600여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찰은 종교적 예배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서 한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정문화재는 총 8,258건이며, 그중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2,85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는 1,670건으로 불교문화재중 59%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사찰에 보관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중 20%가 사중에서 보

관, 관리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소중한 문화재들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해요소는 화재이다. 화재로 인한 재앙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불시에 발생하므로 그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예부터 많은 사지(寺誌)들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사찰이 한 번의 화재로 인해 폐사가 된 경우가 빈번하게 기록된 것은 이런 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문화재들 중에도 화재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건축 문화재이다. 특히 사찰건축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이어서 목재라는 재료



〈사진 1〉 화재 이전의 쌍봉사 대웅전 (왼쪽)

〈사진 2〉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오른쪽)

의 특성상 연소성이 강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일단 불이 붙으면 쉽게 소화할 수가 없어 손실의 규모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보물 163호였던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 대웅전(사진 1 참조)은 1984년 4월 3일에 신도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나 전소되었다. 쌍봉사 대웅전은 목조탑파(木造塔婆)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 희귀한 건축물로 그 가치를 따지질 수 없던 건물이어서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손실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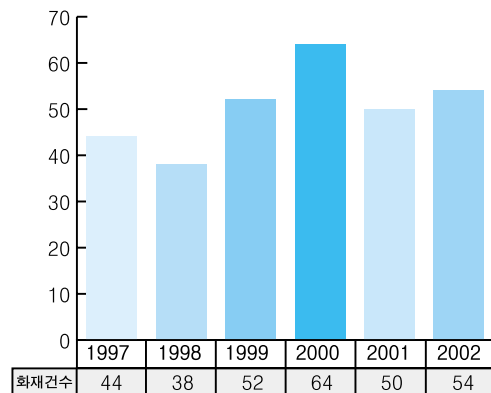
사찰 화재의 피해는 단순히 건축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찰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그 건물 한 동만 전소된다고 하여도 그 안에 안치되었던 귀중한 문화재 여러 점이 같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물 387호 회암사지 선각왕사비(사진 2 참조)는 1997년에 산불이 보호비각에 번져 몸돌이 화기에 노출, 파손되어 3년여에 걸쳐 힘들게 복원을 했던 사례도 있다.

행정자치부 소방국 방호과에서 2003년 4월에 발행한 「2002년도 화재통계연보」를 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사찰에서만 302건이 발생하여 해마다 약 50건씩 화재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도표 1 참조) 이 화재들로 인한 피해규모는 유형적인 것만 따져보아도 재산피해가 약 37억원에 달하고 인명피해도 사망 7명, 부상 48명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 문화적, 정신적인 무형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화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화재원인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예방, 화재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진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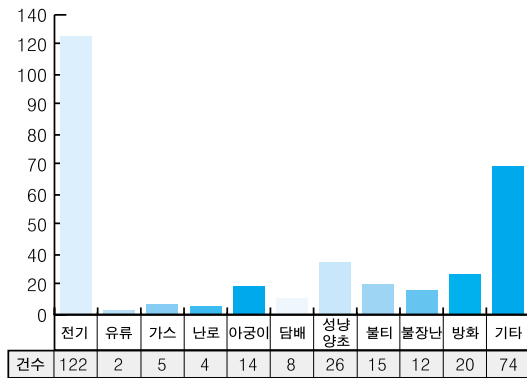


〈도표 1〉 1997~2002년 6년간 사찰화재 발생 건수

이에 사찰 화재의 원인과 사고사례를 통해 사찰 화재예방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고, 개선방향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찰화재의 원인

화재의 원인별 통계를 보면 전기에 의한 화재가 122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냥이나 양초, 취사도구 등 일상 속에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86건, 방화에 의한 화재가 20건에 이르고 있다.(도표 2 참조)



〈도표 2〉 사찰화재 원인별 통계

전기에 의한 화재는 주로 누전과 합선에 의해 발생한다. 현대에는 많은 사찰들에서 연등을 전기불로 대체하고, 음향시설 및 보안장비 등을 갖추에 따라 전기의 사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건물들이 오래된 목조건축이다 보니 전기배선이 현대식 건축물과 같이 내부에 매입되지 못한 채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배선을 연장시키면서 사용하고 있어 합선의 위험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매년 전기누전 관련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실제로 많은 사찰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점검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성냥과 양초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참배객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종교의식상 양초가 항상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요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와중에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취사도구에 의한 화재 역시 목조건물이라는 화재에 취약한 환경에서 화기를 다루다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방화에 의한 화재는 빈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방화라는 행위 자체가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인 만큼 초기진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불이 번지는 속도 또한 다른 경우보다 빨라서 쉽게 진화가 되지 않는다.

3. 화재발생 사례와 예방의 문제점

화재는 일단 작은 규모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예방이 최선책이다. 하지만 완벽한 예방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초기진화대책 역시 병행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에 근래에 발생한 사찰 화재 중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예방과 초기진화의 문제점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가. 강원도 원주 구룡사 대응전 화재

2003년 9월 30일 저녁 9시에 원주 치악산 구룡사에서 과부하에 의한 전기누전이 원인으로 대응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길은 대응전을 다 태운 후 사건 발생 2시간 여 만에 잡혔으나, 강원도 지정문화재 24호로 지정된 대응전이 전소되면서 내부에 있던 불상과 탕화도 불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숙직실에 있던 관리인이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원주소방서에 신고했지만 원주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산길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웠으며, 사찰 자체 소방시설이 미흡해 소형 소화기만으로는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없어 큰 피해를 입었다.

구룡사 대응전은 내부의 특이한 2층 단집 조각기술과 공포(拱包)의 화려한 조각기술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 되어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24호로 1971년에 지정되었던 건축물이다. 중창된 지 10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목재들이 건조해 작은 불씨에도 쉽게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더욱이 대응전에 별다른 방화대책이 없었기에 짧은 시간에 불길이 번져 전소되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동안 건조된 목재가 얼마나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나. 서울 강남 봉은사 명부전 화재

2002년 5월 24일 밤 10시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 명부전에서 전기 합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한 동과 내부에 안치된 영정, 목조 불상 19개가 전소됐다.

이 사건의 경우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사찰의 위치도 도심 내에 있어 소방차도 현장에 빠른 시간에 도착하여 화재 발생 10여분 만에 진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비해 그 피해 규모는 매우 컸다.

이는 초기 진화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화재의 발생을 목격하고 소화기와 인근에 설치된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였지만 소화전은 수압이 약하여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초기진화대책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 2건의 화재사고를 통해 보면 사찰에서 화재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앞에서의 통계와 같이 전기설비의 체계적 관리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사찰에서는 주로 연등과 인등의 전기 사용량이 많은데 비해 이에 대한 별도의 전기안전설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연등이나 인등이 1년 내내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에 맞추어 대량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평상시 전기안전 점검에서는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 건축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여러 동의 건축물들이 모여서 건축군을 형성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찰건축인데 전기의 배선과 누전차단기와 같은 안전장치는 주입선 하나의 배선에 의존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사찰 모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실상 누전 차단기는 말 그대로 누전이 발생하면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누전을 사전에 막거나 합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때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나가

사찰화재에 대한 예방은
전기시설에 대한 정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예방 못지않게 초기경보와 진화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초기진화는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소방방법과는 별도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령과 같은 제도로 보완되어야 한다.

보면 어디에선가 불길의 치솟고 있다고 한다.

이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정전이 되었으나 이미 어느 한곳에서는 합선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음을 말하고 있다.

전기에 의한 화재가 일어날 때 마다 관계당국에서 항상 거론되는 누전차단기의 설치,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이라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초기 진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방도로의 정비와 소화전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구룡사는 소방서와 거리도 멀었기는 하지만 산중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큰 사찰들과 마찬가지로 절 입구까지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내에는 많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사찰 자체의 소방설비는 소방방법에 따른 소화기만이 갖추어져 있고, 옥외소화전은 설치되어있지 않아 목조건축물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봉은사의 경우 소방도로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목조건축물의 특성상 위낙 불이 빨리 번져 손쓸 겨를

도 없었다.

특히 소화전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던 점은 현재 소방대책과 평상시의 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봉은사의 경우 빠른 진화 작업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은 점은 높이 평가 하지만, 초기에 화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를 막지 못한 것은 현재의 소방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개선방안

사찰화재에 대한 예방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찰들은 전기사용량 계산에 따른 분전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선들도 대부분 외부에 드러나 있는 노출배선으로 되어 있다.

노출배선의 경우 전선의 비닐피복이 자연환경 속에서 3년 정도는 성능이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비닐이 경화되어 벗겨지기 시작한다. 그 외에도 쥐에 의해 전선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전기사용량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전반을

설치하며, 배선들은 지하매설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실시해야하는 부분으로, 우선 응급적인 대책으로는 금속제 플렉시블관을 사용하여 유지·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금속제 플렉시블관은 노출배선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배선재료로 기존 전선을 관에 넣어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관계기관에서는 해마다 안전점검만을 강조하고, 누전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위의 제안들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방 못지않게 초기경보와 진화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우선 경보에 대한 대안은 자동화재감지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다.

이는 2001년에 본 종단에서 종현으로 규정한 '방법·방화업무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규정을 보면 모든 사찰은 자동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법방화 조치를 게을리 하여 성보도난 및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지원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찰들이 산 속에 위치해 소방차가 화재발생시 현장에 신속히 진입하기 어렵고, 작은 불씨로 인해 자칫 대형화재나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찰의 초기대응, 자체진압은 예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초기진화는 현재 소방법에 맞추어 구비되어있는

소화기만으로는 실효가 없다는 점이 앞의 사례에서도 밝혀진 만큼, 현재 사찰건축의 대부분인 목조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소방법과는 별도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령과 같은 제도로 보완되어야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사찰화재에 있어서 문제점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런 방안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화재방지를 위해 주요 문화재에 대해 방염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사찰들에서 건물에 습기가 차고 백화형상이 발생하며 단청의 박리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에는 방염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상황에서 어떤 접근방법이 필요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문화재보수비나 각종의 교부금집행에서 화재예방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설계도서검토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등에 있어서 전기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들과 더불어 각 사찰들에서 실화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 자신의 주의만이 실화에 의한 화재를 막는 최선책일 것이다. ☺